‘발로뛴’ 사회 · 노동 · 환경… ‘용두사미’ 화쟁위

2016 사회 결산



최순실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서 사회노동위 스님이 시민에게 촛불을 건네고 있다.

사회노동위 등 종단기구 적극 활동
불교시민사회계 공동 행동도 ‘주목’
화쟁위, 무기력 행보 아쉬움 남아
침체됐던 환경계 재도약 기대 모아

올해 불교계 사회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단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정치 · 사회 현안에 대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불교사회연구소 등 종단기구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개별 활동에 주력하던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탈핵 △국정농단 사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며 저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사태 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침묵과 국내정세에 따른 남북불교교류 단절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에 일각에선 화쟁위원회 정체성이 무색해지며 해체가 거론되기도 했으며,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교류를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한단 지적이 적지 않다.

사회노동위원회 개편 ‘괄목’ 성과

2012년 조계종 ‘노동위원회’로 출범한 후 지난해 12월 확대 · 개편된 ‘사회노동위원회’는 올 한 해 불교계서 가장 폭넓은 사회활동을 보였다.

기존 노동위원회가 노동 분야에 국한된 활동을 펼쳤다면 올해는 △백남기 농민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세월호 인양 및 기간제 교사 순진 인정 촉구 △제1231차 · 12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정기 수요시위 개최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폐지 촉구 △성소수자 초청 법회 봉행 등 사회현안 전반에 대해 불교계를 대표해 나섰다.

특히 최근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선 매주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불교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를 구성하는 등 민심의 편에 섰다. 이는 종단이 정교분리 원칙상 정치 및 사회 현안에 대해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단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올해 1월 26일 새롭게 위촉된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스님들의 역할이 컸다. 실천위원 스님들은 때로는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재를 봉행하고, 또 때로는 조선업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광화문 한복판에 서며 사회적인 파급력을 가져왔다.

‘뜨거운 감자’ 화쟁은 어디로…

올해 시작과 함께 ‘화쟁사상’은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사태서 중재를 맡은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주목받으며, ‘화쟁’이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

이에 조계종은 2016년 신년 종무기조서 ‘화쟁 사상 확산 및 화쟁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화쟁위원회를 비롯한 조계종 사회부 환경위원회 · 사회노동위원회 · 종교평화위원회가 ‘화쟁네트워크’를 구축, 사회 현안을 화쟁적 관점서 풀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조계종은 앞서 6월 28일 입법예고한 ‘화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7월 13일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신설 △화쟁위원 15인서 21인으로 확대 △기존 ‘화쟁위원’ 및 ‘기획위원’ 이분화 체제 ‘화쟁위원’으로 통폐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화쟁위원의 역량 및 역화를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러나 조직 개편만으로 화쟁위가 사회적 중재 기구로서 입지를 확립했다고 보긴 어렵다. ‘화쟁네트워크’는 신년 기자회견 후 공식 거론된 바 없으며, 실제로 화쟁위원회의 올해 활동이 세미나 · 시민대화마당 개최 등에 그쳐 무기력한 행보가 이어졌다.

또한 2010년 봉은사 직영사찰 중재 실패, 2015년 용주사 갈등 및 동국태 사태 조정 결렬에 이어 2016년 선학원 원탁회의 구성 실패까지 종단 내부 사안에 대해선 올해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단 아쉬움을 남겼다.

‘재도약’ 불교환경연대 향후 행보 기대

한동안 조용했던 불교 환경계에 새 움이 텄다. 4대강 사업의 환경적 폐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에 앞장섰던 불교환경연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수경 스님의 칩거 이후 지도층의 부재에 따라 유명무실화 됐던 불교환경연대는 3월 21일 새 상임대표 법일 스님을 비롯한 신임 임원단을 꾸리고 재도약을 선언했다.

먼저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주창하며 4월 3일~7월 11일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에 올랐다. 4대강 수행길은 사업 그 후를 조명하며 환경파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단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후 불교환경연대는 △사드 배치 규탄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탈핵 캠페인 등 대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뿐 아니라, 생명과 생태 관련 소양을 쌓는 ‘녹색불교아카데미(10월 12일~12월 7일)’를 진행했다. 올해 발표한 3년 사업계획서 전국 20여 곳의 녹색사찰과 3곳의 지회 구성, 회원 1000명 및 후원사찰 100곳 만들기를 목표로 밝힌 만큼 향후 저변 확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7기 환경위원회를 출범하며 △사찰림 재선충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사찰 약수 수질특성 조사 및 종합관리방안 연구 등 신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 부결하라”

불교계 26개 단체, 촉구

불교시민사회단체 26곳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환경연대 등 26개 단체(이하 26개 불교단체)는 12월 19일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 산지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으로 일컬어진 이 산지개발사업의 여파로 전국 명산이 케이블카 공사로 파헤쳐질 위기에 놓였다”며 “26개 불교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맞지 않음을 밝히고 사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26개 불교단체는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을 두고 수십 년 동안 부적격 결론이 난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보완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제 남은 희망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뿐이다.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설악산의 산양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생명줄이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기자

대불련 지부 · 지회 복원사업 공모

대학생캠퍼스포교 활성화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부 · 지회 복원을 위해 총동문회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는 내년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7년도 캠퍼스포교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전개한다. 이에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각 지부와 지회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분야는 △특화사업(청춘토크콘서트 및 초청강연회) △거점사업(템플스테이) △전략사업(캠퍼스포교 콘텐츠 퍼실리테이터 양성) △기획사업(지부 · 지회 활성화 및 복원 프로젝트)으로 나뉜다.

신청자격은 대불련 재학생과 동문이며, 지원사업 신청서와 제안서 각 1부를 이메일(daebul333@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전화통화 · 대면 등이 이뤄진다.

신청자는 사업에 대한 예산 또는 행정 · 인력 · 장비 등을 지원요청 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총 2000만원.

(02)720-1963 윤호섭 기자

조계종 “선암사 지역정서 챙기자”

선암사특위, 19일 태고종과 소유권 항소심 앞두고 방침 밝혀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둔 조계종과 태고종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지역민심을 먼저 챙기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암사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정)는 12월 19일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태고종과 진행 중인 ‘선암사 변경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변호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당시 사찰 등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의뢰를 해당기관에 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암사 특위는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역 정서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조계종 선암사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암사 특위는 인근 교구본사와 협의해 지역 여론 개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암사특위는 항소심까지 진행된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차 체험관 철거가 실효가 없음을 들어 순천시와 협의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덕현 기자

사찰 존폐위기 수도사, 1인 시위 돌입

주지 청호 스님, 12월 22일 시공사에 대책마련 촉구



이천-오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로 수행환경 침해 위기에 놓인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이 사찰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조계종 직할사찰 경기 광주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사진)은 12월 22일 금호아시아나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시공사인 금호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수행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이천-오산 구간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제2외곽순환고속도로(주))는 12월 중 착공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청호 스님은 “2009년 수도사 뒷산에 대형고압송전탑이 설치돼 전자파와 소음, 진동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사찰 앞 26m 앞에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돼 더욱 심각한 피해에 직면했다”며 “한국전력과 서울국토관리청, 시공사인 금호산업 측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어떤 민원요청에도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1인 시위는 한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관계당국과 시공업체서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수도사는 1859년(철종 10년) 중창한 고찰로,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08호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을 비롯한 문화재와 성보를 보유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慶 대한불교조계종 제14대 종정 진제 법원 대선사 추대 賀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하고 2천만 불자의
수행과 정진의 표상이신 진제 종정예하의
제14대 종정 재추대를 팔공총림 동화사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경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